

# 중대재해처벌법 1년...산업현장 실효성은 '미미'

### 7건 적용에 기소는 '0건'...여천NCC 대표 1년만에 송치 등 수사 지연 광주·전남 1년간 산재사망 48명...예방 중심 개정 움직임에 노사 갈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2022년 1월 27일)된 지 1년이 됐지만,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실효성이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처법의 뚜렷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처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처법 1년 광주·전남 산업현장= 광주·전남 중처법 적용 1호 사업장인 '여천NCC' 대표가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여천NCC 대표 최모씨와 김모씨를 지난 6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1일 여천NCC에서 열교환기 청소작업 도중 설비가 폭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 당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노동청의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에도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는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달에 4명 꼴로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숨진 것이다.

이 가운데 7건이 중처법 적용사건으로 3건만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의원실이 확보한 중처법 시행 1년동안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공소장 총 11건 중 광주·전남에서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면서 지난 1년 동안 중처법 관련 뚜렷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엄격한 처벌사례가 없어 기업들이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사망사고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처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경영계와 정부의 법 개정 의지가 맞물려 수사가 늦어진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

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자는 "처음 적용하는 법이다 보니 추가 조사가 필요했고,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중처법 개정을 놓고 노사간 갈등=최근 정부가 중처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말에는 정부가 중처법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앞으로 5개월 간 '처벌 대상 및 수준 등 제재 방식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중처법 개정을 놓고 노사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

안전보건법으로 특정 ▲'필요한', '충실한' 등의 모호한 표현 삭제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 등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대중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상 처벌보다는 예방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법의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한 만큼 관련 내용을 정비한 뒤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외 입법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중처법의 안착이 필요한 시기에 개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데다, 여전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오산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발표한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는 타당공론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30~99명 사업장 규모에서 노조 조직률은 1.6%, 30명 미만은 0.2% 수준이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사측과 대등한 관계에서 안전 설비를 마련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6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흥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불법체류자 추방 청구 받고 흥기 위협·금품 강탈 일당 구속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추방해 달라는 청부를 받은 내국인 일당이 불법체류자들을 흥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쳐 구속됐다.

광주광안경찰은 광안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도 행위를 한 A(40대)씨와 20대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날 강도 피해를 당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B씨 등 4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일당은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B씨 일당이 거주 중인 광주시 광안구 월곡동 아파트를 찾아가 흥기로 위협하고 귀금속 등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은 지난 2018~2019년께 한국에 입국해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일당은 경기도 수원에 거주 중이며, A씨의 태국인 아내가 지난 C씨로부터 현금 400 만원을 받고 광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B씨 일당을 추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과거 B씨 일당과 함께 광주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비자가 만료된 뒤 B씨의 신고로 태국으로 추방당한 바 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여순사건 피해 신고기간 연장·직권조사 확대를”

### 관련 시민단체들 촉구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직권조사를 확대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정국유족총연합 등 시민단체는 25일 순천시 연향동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1일 '여순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위원회)가 출범한 뒤 1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지역사회가 요구한 운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왔다"며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

문제 제기를 해도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위원회와 지역사회의 소통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희생자나 유족이 없도록 피해자 신고 기간을 즉시 연장하고, 직권조사 등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여순위원회에 민간 상임위원을 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고령의 유족을 위해 전문조사관과 사설조사원을 빠르게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1년에 걸쳐 피해자 신고를 받아 669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네팔 여객기 참사’ 유씨 부자 유해 국내 송환

### 장성 상무대에 빈소...27일 발인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성 상무대 상사 유모(45)씨와 중학생 아들(14)의 유해가 10일만에 국내에 돌아와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씨와 아들의 빈소가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군인아파트 내 불교 시설인 명성관에 마련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아들에게 추석을 선물하기 위

해 트레킹에 나선 유씨와 아들은 지난 1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부자의 유해는 사고 발생 5일만에 유가족과 외교부의 신원 확인을 거쳐 지난 21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장성으로 옮겨졌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사흘간 치러지며 발인식은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장지는 장성 추모공원으로 정해졌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설 연휴 쌓인 스티로폼

설 연휴가 끝난 25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연휴기간 배출된 스티로폼 재활용품 수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수거된 스티로폼은 건설 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이유 답하라”

### 강제동원시민모임, 답변 촉구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외교부가 양금덕할머니 인권상-훈장 서훈 질의를 한 달째 '묵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제도 및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15일 외교부에 게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훈장 서훈 질의를 보냈지만 외교부로부터 한달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고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답변 또한 듣

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외교부에 질의한 내용은 세계지로 ▲국무회의의 안전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대법원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 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지 ▲형평성 때문이라면 외교부가 양 할머니를 포함해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 및 국민훈장 포상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할 의사가 있는 지다. /민현기 기자 hyunki@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